

10년간 우리학교에
기부하고 있는
경희 후원의 집 가족,
박기준 씨를
만나보았다.



총여학생회 공백, 문제점과 대안 기구의 방향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대학주보

국제캠 폭력예방교육 2년 연속 부진기관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우리학교 국제캠이 2년 이상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적을 받았다. 예방교육 점검 결과가 대학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가 2년 이상 부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부진기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폭력예방교육은 정부에서 성폭력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교육 대상인 국가기관 및 학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국 1만 7,693개 점검 대상 중 16개 기관이 2년 이상 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대학교는 우리학교 국제캠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를 포함한 5개 교가 유일했다.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에 따르면 대학교는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진기관으로 등록된다. 국제캠은 기관장 교육은 이수했지만 고위직참여율이 46%에 불과해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적됐다. 점검기준표 합계 점수는 여가부 측에서 밝히지 않았다. 반면, 서울캠은 고위직 참여율 72%를 기록하는 등 모든 실적 기준을 넘겨 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위직에는 부총장, 실·처장 및 전임교원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올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부진기관으로 지적될 경우 과거와 달리 점검 결과가 대학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가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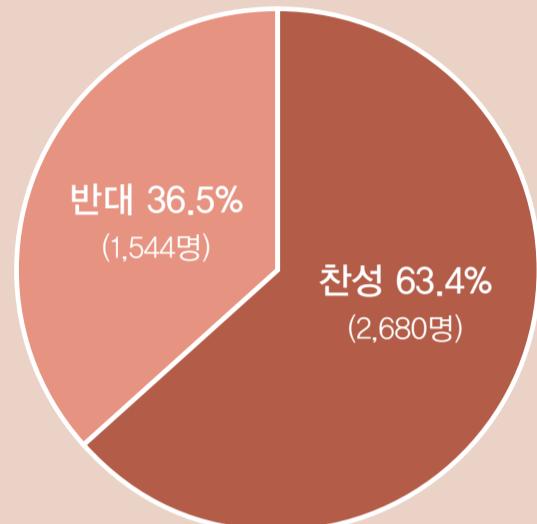
관은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각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학평가인증 결과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된다. 국제캠이 부진기관으로 지적된 만큼 실적 부진이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학교의 정부재정지원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다.

내년 발표되는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부터는 종사자참여율(직원참여율)과 학생참여율이 부진기관 기준에 추가된다. 이 경우 서울캠도 부진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캠의 종사자참여율은 61%로 부진기관 기준인 70% 미만에 해당된다. 학생참여율의 경우 2020년 6%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참여율은 한시적으로 전년 대비 5%p만 증가시키면 부진기관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부터는 50% 이상을 넘겨야 부진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미 부진기관으로 지적된 국제캠도 2020년 종사자참여율은 29%, 학생참여율은 4%에 불과해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 캠퍼스 모두 내년 부진기관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결과에 대해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부진기관 등록 이유가 고위직참여율 때문”이라며 “고위직 및 학생참여율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본부, 단과대학, 총학생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비대면 교육만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참여율 개선이 예상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캠 성평등상담실은 개정된 폭력예방교육 실적 기준에 대해 “바뀐 기준을 인지하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여 해산 결정 투표 결과



(*재적인원 8,378명 중 4,224명 참여)

〈총여학생회 해산 결정 투표를 위한 논의 과정〉

7.16 (금)	제1차 공개 간담회 진행
7.22 (목)	제2차 공개 간담회 진행
8.10 (화)	제4차 확운위에서 여학생 투표 안건 부결
9.7 (화)	제5차 확운위에서 여학생 투표 안건 가결
9.23 (목)	총여 해산 결정을 위한 투표 시작
9.27 (월)	총여 해산 결정을 위한 투표 종료 (투표율 50.4%)

총여 해산 결정 투표 결과와 논의 과정

서울캠 총여 해산 찬성 63.4%로 가결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총여학생회(총여)의 해산이 결정됐다. 지난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 총여 해산 결정 투표 결과다. 서울캠 여학생으로 구성된 유권자 8,378명 중 4,224명(50.4%)이 참여했으며, 참여인원 4,224명 중 찬성 63.4%(2,680표), 반대 36.5%(1,544표)로 투표인원 1/2 이상 찬성을 얻어 총여 해산 결정이 가결됐다.

개표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투표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기존 투표 일정

의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6시, 투표율이 40%에 그쳐 하루가 연장됐다.

1차 연장된 투표에서도 45.7%로 50%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거듭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5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가결된 안건의 단서조항에 따라 최대 이틀간 투표 기간 연장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총투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 연장 기간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6시 투표율 50.4%로 간신히 개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

은 규정에 맞게 원칙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내 혐오와 차별이 사라져서 총여가 해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여를 대신할 대안기구의 형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학생들과 함께 그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8면>

대안기구 신설 회의체와 관련해 남 회장은 “설문조사나 공개간담회 형식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회의체를 채택할지, 깊은 논의가 가능한 학생참여형 TF를 꾸릴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대안기구 신설은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87년에 출범된 우리학교 서울캠 총여는 대표자의 부재로 궐위 상태가 지속된 지 4년 만에 해산됐다.